

#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 서론

1996년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한해였다. 연초의 『국민복지기본구상』, 3월의 『장애인복지종합대책』, 8월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 등 여러 시책들이 발표되었고 정부간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할 수 있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금년은 이렇듯 성숙된 제반 여건을 잘 활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장애인복지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金 幸 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불리(handicap)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주로 의료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등으로 인하여 월평균 11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나,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구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능력장애는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말한다. 신변처리능력(목욕 및 식사능력, 배설통제 등), 운동능력(보행능력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능훈련, 직업훈련 등 각종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사회적불리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사회적불리에 대하여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 이를테면 취업 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시라든가 사회적 인식의 증진 등의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장애인복지시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 가. 생활안정지원 강화

##### 1) 현 황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 인구의 2.35%인 105만 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은 1996년말 현재 추정장애인의 약 40%인 42만여 명에 불과한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복지시책의 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등으로 인하여 월평균 11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나,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구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 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및 소득세·상속세 추가공제 등 경제적 부담경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

(단위: 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2.
장애인수	272,541	293,467	317,939	347,275	378,323	416,889

표 2. 생활안정 지원시책

시 책	지 원 내 용
생계보조수당 지급	생활보호 1, 2급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중복) 장애인에게 월 4만 5천원 지급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고교생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및 외래 50% 지원
자립자금 대여	700가구에 가구당 1200만원(이자: 연 6%)
장애인자동차 이용편의지원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LPG 사용 허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각종 공공요금 감면	공원 등 이용요금 면제, 지하철·철도·항공요금 감면, 전화요금 및 TV 수신료 감면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자금의 지원대상가구와 지원액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 2) 정책과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자금의 지원대상가구와 지원액수준을 확대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세 추가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주택구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지원시책의 개발·시행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집행, 보장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품질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1)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청사 등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27%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며, 취업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장구의 보급률이 낮고 국산제품의 품질이 열악하여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시설의 건립 반대 시위 등에서 표출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정책과제

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의료보험·의료보호급여 사업을 확대하고 보장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전문인력양성, 자격제도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보장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수화교실운영 지원, 장애인 1일 체험의 날 실시 등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둘 사이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하여 청소년층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강화

### 1) 현 황

그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시설수용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24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

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재활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충분한 숫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표 3.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계	40,796	100.0	57,886	100	67,361	100.0	93,843	100.0
보호시설운영	27,712	67.9	39,373	68	46,935	69.7	53,916	57.5
재가장애인복지	12,144	29.8	17,380	30	18,335	27.2	36,347	38.7
장애인단체지원	940	2.3	1,134	2	2,091	3.1	3,580	3.8

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립자금대여)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제외

표 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비 고
수용시설	177	• 15,240명 수용(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인)
• 재활시설	113	• 부설보호작업장에 장애인 2,700여 명 취업
• 중증요양시설	57	• 중증장애인의 치료, 요양시설
• 근로시설	7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66	
• 장애인복지관	41	• 재가장애인에게 상담, 의료, 직업재활 등 각종서비스 제공
• 재활병의원	13	• 의료서비스 제공
• 체육관	12	• 수영 등 체육서비스 제공
계	243	

## 2) 정책과제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재활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충분한 숫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능훈련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도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의 처우개선문제도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작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능훈련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도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4. 결 론

이 외에도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범주 확대 등 장애인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금년중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998~2002) 계획의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연내에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마련과 법개정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정책과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관련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며 민간에서도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